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4일(금) 총 10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 시민참여팀장 장일진 ☎440-2416 • 담당자 조영희 ☎440-241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청원#49〉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인천시, 캠프마켓 건축물 존치·철거의 최우선 기준은 시민의 안전!

- 역사유산 보존과 토양정화라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판단할 것 -
-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인천광역시는 24일, ‘부평캠프마켓 완전한 환경오염정화 요청’과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답변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단절의 공간이었던 부평 캠프마켓의 반환노력과 토양 정화 등 전 과정에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번 시민청원은 최근 시와 시민참여위원회가 B구역 내 1780 건축물(조병창 건물)의 토양정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춘천 미군기지 부실정화 기사를 언급하며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건물 전체 철거와 완벽한 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이어졌고, 30일간 3,086명의 공감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1780 건축물에 대한 핵심 쟁점은 철거 내지 해체하지 않고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이었다” 라며 “우리 시가 역사적 이해와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모든 건축물들은 철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책임은 국방부에 있고 이를 시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의 문제에서도 어긋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인천시는 역사유산 보존과 토양정화라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이라며 “역사 문화 건축적 가치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학술조사, 정밀기록화, 연계조사,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토양환경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 나갈 것” 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캠프마켓의 기본방향은 시민 안전을 담보한 ‘가능한 모든 건물의 존치’ 이나 최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시민의 안전’ ” 이라며 “토양정화와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일부 건축물의 철거 내지 해체를 실시하되 반드시 복원토록 할 것이며 기술적으로 온전한 복원이 어렵다면 그 가치와 의미를 살릴 복원방안을 찾겠다” 고 밝혔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답변원고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 원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박남춘입니다.

의견을 주신 시민시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작년 10월 14일, 굳게 닫혔던 캠프마켓 철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1년간 닫혀있던 면적 44만 제곱미터, 여의도공원의 두 배 가까이 큰,
부평 한복판 금단의 땅을 드디어 반환받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강이남 최대 크기의 조병창,
주한미군의 애스컴시티 그리고 캠프마켓의 주둔지로 사용되는 동안
이곳은 시민들에겐 잃어버린 역사, 단절의 공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반환 노력은 1995년 즈음부터 시민사회가 앞장섰습니다.
천막농성, 인간 띠 잇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고
인천시와 부평구, 정치권이 함께 발맞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LPP, 한미 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따라
캠프마켓의 이전 및 부지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으로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를 막아냈고
2006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 제1차 발전종합계획 확정을 통해
공원과 공공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고,
막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A구역에 있던 군수자재 재활용 유통소인 DRMO는
경북 김천으로 먼저 이전했지만,
이후 캠프마켓 평택 이전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다가
미사용 지역인 A, B, C구역에 대한 우선반환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SOFA 시설분과위원회의 우선반환구역 경계 확정에 따라
2015년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조사에서 다이옥신, 유류계 등으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어
지금 A, B구역에 대한 토양정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련의 반환과정에서 폭 넓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민선 5기 때 처음 구성되어
공원의 성격을 문화, 역사공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장물에 대한 조사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등
반환 이후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선6기 참여위원회 때인 2017년에는
우선반환 대상인 A구역의 다이옥신 오염에 대해
정화 방법과 안전 기준치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캠프마켓 복합오염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의 노력은
토양 내 다이옥신 정화를 시도한 국내 첫 사례이자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시와 참여위원회가
B구역 내 1780 건축물의 토양정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1,324제곱미터 면적의 이 건축물은
일제 때 근로자 병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52년 미군 인수 후에는
군인들의 휴게시설과 다목적 저장시설 등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핵심 쟁점은
철거 내지 해체하지 않고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와 참여위원회는 이 건축물이 오래된 조적조와 목조 건물이어서
그대로 둔 채 토양정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거 내지 해체 후 복원을 전제로 토양정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시가 역사적 이해와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모든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캠프마켓 내 전체 시설물은 136개이고
이 중 2011년 문화재청 조사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추정되는 것은 30개입니다.

이 중 8개는 A, B구역에,
뽕공장 이전으로 곧 토양오염조사에 들어가는 D구역에는
가장 많은 22개가 있습니다.

근대건축자산은 법령상 보전 의무가 있고
반환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만큼,
안전진단 후 가능한 한 모든 건축물을 보전 또는 존치 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건축물 밑 토양은
TPH라고 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에 오염되어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우연하게 섭취, 피부접촉, 공기흡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종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A, B구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80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한 채,
지중정화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3일 문화재청은
D구역 시설물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D구역 조사 때까지 1780 건축물의 철거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문화재청의 요청에 대해
정화완료 및 전체반환 일정 지연,
추가오염 확산과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 캠프마켓 담장을 허무는 데 8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더딘 걸음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긴 호흡으로 공원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걸린 토양정화가 우선되지 않고 미뤄져서
반환일정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780 건축물만 남겨 두거나
다른 정화방법으로 천천히 하자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공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화해야
전체 반환, 활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토양정화 책임을 시가 가져온다는 것은
오염 원인자가 해결해야 하는 환경정의 문제에서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역사유산 보존과 토양정화라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역사 문화 건축적 가치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학술조사와 함께

정밀기록화 용역을 추진 중이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D구역 연계조사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토양환경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리TF도 구성한 만큼,

체계적인 인천 문화자산 관리 방향성 등도 수립할 것입니다.

10월에 열리는 제4회 시민생각찾기와 시민참여위원회,

그리고 부평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일정이 늦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설계 공모 전,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 구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80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준치 대상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 중인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캠프마켓의 역사는 물론,
반환을 위한 시민행동과 토양정화 과정 등
금단의 땅을 되찾기 위한 지난 우리의 시간과 노력 모두를
지속적으로 관리, 기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시민청원을 통해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을 확인했고,
큰 책임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캠프마켓은 아직 ‘반환 진행 중’ 이고
완전한 개방과 온전한 공원 조성까지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가능한 모든 건물의 존치’ 입니다.
보전의무가 있는 근대건축자산과 역사문화공원의 일부로 기능할
가능한 모든 건축물은 보전하거나 존치 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설계공모를 통해 확정될 것이나
그 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원 기본구상 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시민의 안전’ 입니다.

토양정화,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일부 건축물의 철거 내지 해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온전한 복원이 어렵다면

그 가치와 의미를 살릴 복원방안을 찾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다음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적당히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반환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하고
문화공원으로서 캠프마켓을 지켜가겠습니다.

단절의 상징이던 캠프마켓이
시대를 잇고 지역을 잇는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전문가들의 정책 조언을 집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마켓이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녹색공원,
인천과 부평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부평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